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2025. 12. 16. (화) 배포

Tel. 02-784-6950

Email jhkang315@gmail.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7호

담당: 강정욱 선임비서관

쿠팡 정보유출 대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상습적 중대 유출 사업자 등에겐 징벌적 과징금, 매출액 10% 적용
-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권리 등 통지해야 할 사항 확대
- 민주당 중심의 입법화 주도, 야당과 개정안 합의 이끌어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소위원장 강준현 의원)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지난 15일(월), 정무위 법안1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은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 유출로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낳은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출액의 최대 3%인 현행 과징금 규정을 개정, 반복적이고 중대한 정보유출을 일으킨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한 점이다.

이는 과징효과가 심각하고 상습적인 정보유출 사태를 야기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보호를 이행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을 더한 것으로 쿠팡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 국회 및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담당을 하도록 책임규정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인증을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제외해 인증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개정안은 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 경위뿐 아니라 손해 배상 및 분쟁조정 청구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추가 통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기한 역시 공익성과 기술적 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단체소송 시 제소 대상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어 추후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화를 보강해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 하고 야당과 합의해 이룬 성과다. 박범계, 김상훈 의원 등 국회 정무 위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안이 처리됐으며, 강준현 법안1소위 위 원장의 적극적인 의견 중재와 합의 도출로 신속하게 개정안이 통과 됐다.

소위원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보 호법 통과는 쿠팡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과 국민 개개인의 권익 침해에 맞서 신속한 제도개선을 이뤄낸 의의를 지닌다” 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시는 쿠팡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끝>